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청소년기 혼자 영화 보기를 즐겼던 나는 영화 시작 전에 올리는 '애국가'가 꽤나 불편했다. 남다른 정치적 신념 때문이 라기보다는 당시 음반마다 한 곡씩 삽입 되었던 이른바 '건전가요'처럼 그 '애국 가'가 내 미감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스크린 가득 휘날리는 태극기와 함께 자발 적으로 일어선 극장의 관객들 속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들어야 한다는 게, 예컨대 영화 '터미네이터'나 '백 투 더 퓨처'를 보기 위한 준비로는 생뚱맞다고 느낀 것이다.

극장의 스크린에 태극기가 필적이고 애국가가 흘러나와도 나는 팔짱을 낀 채 객석의 좌위에 파묻혀 일어나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런 나를 대놓고 꾸짖는 어른들은 없었지만, 그리고 '애국가' 1절이 흐

‘국뽕’과 ‘국까’ 사이

르는 1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벌떡 일어선 관객들의 숲속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매번 짐пан 나는 일이었다.

어린 시절 내게는 애국심이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애국'의 행위나 태도가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에 의해 강요된 비합리적 맥락 속에서 많은 경우 '미감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 왔다는 사실은 넓게 보아 한국 현대사의 희비극이기도 하다. 이러한 희비극은 최근의 이른바 '태극기부대'의 행보로 이어진다. 어린 시절 음반 속 '건전가요'나 극장의 '애국가'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그악스런 '태극기부대'가 표방하는 '애국' 또한 젊은 세대들의 미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듯하다.

세대를 불문하고 진보적이거나 비판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들일수록 (최근에는 이른바 '헬조선' 담론에 동참하면서) 자주 '애국'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나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냉소는 대체로 당대의 젊은 세대들과 공명하여 세대 간 진영 논리를 형성하기도 했다. 인터넷 용어로, '국뽕' ('국가'와 '히로뽕'이 결합된 용어로 도취적

자극중심주의를 보이는 태도나 사람의 가리킴)보다는 그레도 '국까' ('국가'와 '까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로 자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일삼는 행위나 사람을 가리킴)가 젊은 세대에게 좀 더 '쿨'해 보였다고나 할까?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이미 '쿨한 국뽕'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후진국 콤플렉스를 일소하고 있는 세련된 글로벌 스타들, 예컨대 EPL의 손흥민, MLB의 류현진,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국제적 활약은 인터넷 담론상에서 '국까'를 오히려 '쿨'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심리를 곧바로 '애국'이나 '애국심'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진보 정치가 계속해서 환멸과 냉소의 수사에 의존하고 편협한 '국까'로서의 이미지로 비치는 한, 젊은 세대들의 미감과 더 이상 공명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한국에서 '애국'이 정치적 보수를 위한 배타적 언어처럼 간주되어 온 이유는 '애국' 자체가 보수적 이념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진보 정치 세력이 이 개념과 관련한 프레임 전쟁에서 자정 보수 세력

에게 졌기 때문이다. 언제부터나 한국의 보수 세력은 '애국'이라는 말을 독점하여 '반공'이라는 뜻으로 전용하는 데에 성공했다. '애국 보수'라는 흔한 표현은 사실상 '반공 보수'를 뜻할 뿐이다. 결국 '무엇이 애국인가?'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제대로 답해지지 않은 물음으로 남아 있다. '애국가'를 어떻게 듣고 불러야 하는 것인지도.

적어도 그 한 가지 답변은 1980년 광주에서 제시되었다. 지난 5월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 속 어느 증언이 기억에 남는다. 오월 민중항쟁 당시 무기 반납을 거부하고 최후 항전을 벌이던 어느 의명의 시민군이 했다는 말, "우리도 애국 한 번 할랍니다." 광주의 시민군이 목숨을 내걸고 실천한 '애국'은 무엇이었을까? 광주의 시민군들은 일반 시민에게 충을 겨누는 국가의 반란군에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 '국뽕'이 아니었지만,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불렀다는 점에서 '국까'도 아니었다. 청소년기의 쓸쓸한 기억과 거듭 제기되는 작곡가의 친일 논란에도 내가 '애국가'라는 노래를 온전히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고

사회 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땀방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나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 숭고한 것도 삶을 위한 노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삶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을 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선각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다.

지난 세기 후반, 필자가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 당시 한국은 산업화 시대의 한 복판에 있었다. 산업화의 최대 역군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산업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산업화 시대,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소외받고 착취당하며 핍박받았다. 1971년 4월 서울 정계천 피

복사가에서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했던 양복 재단사 전태일 열사는 당시의 모순된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다.

21세기인 요즘,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 복지 시대에 살고 있다. 이상적인 복지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100만 사회 복지사 시대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들을 '사회 복지 노동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특히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 복지사는 사람이 사람에게 실행하는 휴먼 서비스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형편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이나 주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참여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격무에 시달린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의 자살 소식도 있었고, 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힘겨운 근무 조건과 환경이 해묵은 과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6월 5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광주 복지 민·관·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복지계의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대토론회는 열기로 가득했다. 2013년 4월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민·관·정(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복지재단)이 하나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토론회 행사 서두에서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 처우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선언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민·관·정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에서 가장 큰 과제는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 시간과 보건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미준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

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복지사 처우 및 인권 관련 권고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요원하다. 지난해 2월 사회 복지 서비스업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다'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근로 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하지만 사회 복지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 불합리한 인력 배치 등 구조적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복지계에서 자주 듣는 "사회 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가난과 불행, 불운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돕고자하는 사회 복지사들이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면 어떤 복지 정책보다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나온 말일 것이다.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에 사회 복지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포용적 복지 시대에 '복지 노동자'로서 사회 복지 종사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결국 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과 함께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고

6월 항쟁과 촛불 항쟁, 그리고 자치 분권



김삼호 광주시 광산구청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로 선출됐다. 고려대학교 총학 생활이기도 했던 그는 학우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1987년 6월 항쟁을 맞았다. 당시 6월 항쟁을 이끌던 조직은 약칭 '국본'으로 불리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국본에서 상황 실장으로 활동했던 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다. 6월 항쟁 주역들이 30여 년 만에 당 대표와 원내 대표로 집권 여당 중심에 섰다. 이는 항쟁 이후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청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뜻한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광장을 가득 메운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침은 헌법 개정으로 이어져,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그리고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정

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 감사를 정착시켰다. 6월 항쟁의 성과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착을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후 한 세대 만에 등장한 촛불 항쟁은 민주주의를 절차에서 내실로, 형식에서 실용으로 채우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필자는 자치 분권과 지역 경제로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촛불 항쟁은 지금까지의 광장과 다른 점이 있다. 광장의 주도권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이동했다. 1987년의 광장에는 수많은 깃발이 나부꼈다. 대학교 학생회와 시민·노동단체 깃발이 대다수였다. 깃발은 조직을 뜻한다. 한 깃발 안의 동지들이 대오를 갖추 투쟁했다.

촛불 항쟁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시민들이 주를 이뤘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나오거나 유모차를 끌고 광장을 차곡차곡 채웠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장 그 자체요, "행동하는 양심"이자 "깨어있는 시민"이었다.

당시 시민들은 스스로 참여했고, 개인과 개인의 연대로 자치를 가장 수준 높은 자치를 구현했다. 이것은 자치 분권의 지향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촛불 항쟁을 계승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자치 분권을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저서 '경제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평등이 지켜져도 일부 개인·집단이 다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면 불평등이 민주주의 정당성과 효과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주의가 필수라는 로버트 달의 주장을 필자는 지지한다.

문제는 경제 민주주의를 이를 주체와 단위이다. 중앙 정부 또는 재벌이 주도하는 현재의 경제 질서로는 일자리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들다. 거대한 몸집 때문에 정책이 모든 상황에 맞아떨어지기 어렵고, 성과의 파급 속도 역시 기대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질서가 아주 강해서 경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은 그렇지 않다. 우선 기동성이 좋다.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전략으로 경제 정책을 구사할 수 있고, 성과를 거두면 체감 속도 또한 빠르다. 시민 사회와의 협치로 민주주의 원리를 경제에 적용시켜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 경제 정책이 이미 지역에서 싹트고 있다.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공기산업을 육성해 기업의 창업

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광산구가 좋은 본보기다. 시민과 지방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광장의 염원을 충족시키고, 이를 실용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적 경제는 자치 분권의 핵심이다. 내 고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갈 필요 없고, 경제에 활력이 돌아 지역 복지의 폭넓도 올릴 수 있다. 또 수십 년간 세를 균한 승자 독식 경제에 균열을 내고, 정의와 풍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대한민국에 세울 수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날조하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혐오하는 범죄가 최근 늘고 있다. 이들을 자연스레 소멸시킬 근본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밥도 먹여 준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절차에서 내실로 민주주의를 진보시키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를 일구는 일은 6월 항쟁과 촛불 항쟁을 계승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 길을 지역에서 개척했을 때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강조한다. "나리다운 나라"를 외치는 이 시대에 "자치 분권과 민주적 경제"로 화답하자고.

社說

항공 산업단지 조성 무안공항 활성화 전기로

무안국제공항 주변이 항공 정비 및 물류·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이러한 계획이 최근 정부의 심의를 통과한 것인데, 전남도와 무안군이 세 차례 도전한 끝에 이뤄 낸 성과다.

국토교통부는 옛그제 무안군 망운면 일원에 대한 항공 특화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367억 원을 들여 34만 9000㎡의 부지에 항공기 기체·엔진·장비 등을 점검·수리할 수 있는 정비장과 물류·운항 시설을 조성, 항공 정비 전문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지난해 두 차례 항공 산업단지 지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입주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하지만 전남도와 무안군은 리투아니아 항공 정비 업체인 에프엘 테크닉스 및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그리고 항공기 정보 서비스 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입

주 업체를 100% 확보함으로써 이번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항공기 정비 수요는 오는 2025년 이면 4조 3000억 원 규모로 연평균 5.1%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국내 항공사들은 해외 위탁 점검·정비료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건설됐지만 개항 12년이 되도록 이용객과 취항 노선이 적고 인프라 또한 열악해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 특화 산업이 조성되면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공항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이번 산단 지정을 계기로 무안공항 주변을 국내 항공 정비·물류 산업의 메카로 키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정부 또한 활주로 연장 등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해 무안공항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오늘 6·10항쟁 32주년 '6월 정신' 되새기자

오늘은 6·10 민주 항쟁이 일어난 지 32주년이 되는 날이다. 30년 전 오늘, 수백만 시민·학생들은 전국 주요 도시의 중심가에서 맨주먹으로 폭압적인 군부독재에 맞서며 도도한 민주화의 길을 열어젖혔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새로 세운 것이다.

6·10항쟁은 전두환의 '4·13호헌조치' 발표 후, 1987년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으로 확산된 민중항쟁이자 민주화운동이었다. 그해 6월 광주-전남 지역 역시 민주화를 갈망하던 열기로 뜨거웠다. 신문부에 의해 짓밟혔던 1980년 5·18 정신은 7년 뒤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되살아났고 민주정부 탄생과 최근의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다.

32년 전 그날의 열기가 오늘 광주-전남 곳곳에서 되살아난다. 오후 7시 광주시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민주주의 념식이 열린다. 올해 기념식은 '일상의 민주주의의 념어,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를 주제로 오월어머니합창단 공연, 노동자·농민·청년·여성·장애인 등이 참여한 가에서 맨주먹으로 폭압적인 군부독재에 맞서며 도도한 민주화의 길을 열어젖혔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새로 세운 것이다.

6·10항쟁은 전두환의 '4·13호헌조치' 발표 후, 1987년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으로 확산된 민중항쟁이자 민주화운동이었다. 그해 6월 광주-전남 지역 역시 민주화를 갈망하던 열기로 뜨거웠다. 신문부에 의해 짓밟혔던 1980년 5·18 정신은 7년 뒤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되살아났고 민주정부 탄생과 최근의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다.

32년 전 그날의 열기가 오늘 광주-전남 곳곳에서 되살아난다. 오후 7시 광주시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민주주의 념식이 열린다. 올해 기념식은 '일상의 민주주의의 념어,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를 주제로 오월어머니합창단 공연, 노동자·농민·청년·여성·장애인 등이 참여한 가에서 맨주먹으로 폭압적인 군부독재에 맞서며 도도한 민주화의 길을 열어젖혔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새로 세운 것이다.

주주의 념어,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를 주제로 오월어머니합창단 공연, 노동자·농민·청년·여성·장애인 등이 참여한 가에서 맨주먹으로 폭압적인 군부독재에 맞서며 도도한 민주화의 길을 열어젖혔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새로 세운 것이다.

6·10항쟁은 전두환의 '4·13호헌조치' 발표 후, 1987년 6월 10일을 정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으로 확산된 민중항쟁이자 민주화운동이었다. 그해 6월 광주-전남 지역 역시 민주화를 갈망하던 열기로 뜨거웠다. 신문부에 의해 짓밟혔던 1980년 5·18 정신은 7년 뒤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되살아났고 민주정부 탄생과 최근의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다.

32년 전 그날의 열기가 오늘 광주-전남 곳곳에서 되살아난다. 오후 7시 광주시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민주주의 념식이 열린다. 올해 기념식은 '일상의 민주주의의 념어,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를 주제로 오월어머니합창단 공연, 노동자·농민·청년·여성·장애인 등이 참여한 가에서 맨주먹으로 폭압적인 군부독재에 맞서며 도도한 민주화의 길을 열어젖혔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새로 세운 것이다.

無 等 鼓

"가까운 미래에 계급 전쟁은 빈자와 부자의 대결이 아니라 젊은이와 노인의 싸움으로 다시금 정의될 것이다." MIT 대학의 레스터 서로 교수(경제학)가 1996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꼭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작금의 한국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실시한 '사회 통합 실태 및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62%가 "10년 후 고령자와 젊은이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도 저서 '세대 게임'을 통해 세대에 대한 의미를 들려준다. 그는 세대에 주목하도록 판을 짜 전략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활동을 '세대 게임'이라 정의한다. 여기에는 '세대 당사자'와 게임을 고안하고 플레이하는 '세대 플레이어'가 있다. 전 교수는 후자인 세대 플레이어를 주목하는데, 이들은 사회 현안을 세대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부호화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집단이다.

최근 정부가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언급한 가운데 세대 간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고령화 추세에 비춰 보면

65세 정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는데, 정년 연장이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시각과 청년과 노인은 업종과 직종이 달라 대체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문제는 정년 카드를 세대 간 전쟁으로만 보는 프레임이다. 세대 담론의 남용은 '세대 게임'이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다. 특정 사안을 세대 간 다름으로 보는 것은 이득을 취하는 세대 플레이어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자본과 기업 외에도 이에

기생하는 정치권력, 계급 같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이 내년 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층이 많은 586세대(50대·80년대대학·60년대생)를 의식한 전략이라는 설도 있다.

철학자 시몬느 드 보바르는 '어성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의 말을 빗대면 '세대 또한 태어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일 터다. 세대는 연령으로만 구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을 담고 있다. 나이를 두고 편 가르기가 일상화된 시대, 세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